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ZERO 총력 다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방지설비 개선공사 완료, 탈취용 악액세정탑 추가 설치

남원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주민들과 편의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악취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방지 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탈취용 악액세정탑 설치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 방지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9

월까지 법정 의무사항인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해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마쳤다. 진단 결과, 고농도 악취는 농축조, 농축액 저류조, 슬러지 저류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구역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탈취용 악액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4월 중순 착공해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생태습지공원과 야구장, 파크골

프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 민간 관리대행사가 상주하며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법적 기준 준수와 함께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악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휴식 공간과 공존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연장 확정

오는 8월 27일까지…고용안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여수시는 오는 2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고용 정책 기본법」에 따라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최초 지정된 이후 6개월간 선제대응지역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오는 8월 27일까지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연장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지원을 이어갈 수 있어 기업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그동안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연장 의견서를 지난 2월 초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 중이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관광·산업·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수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에서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국정과제 등 기준 정책과 연계한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덕현 기자

군산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어 경

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군산시가 2만 8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 8천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김강준 시장은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김제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종합상담 운영



김제시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종합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김제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2,200여 명(24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의 보호,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 취업연계 상담, ▲한국어(TOPIK)·지계자 자격증 취득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 행사 운영,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 ▲내·외국인 근로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기존 지원 정책에서 한단계 확장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기 어려운 원스톱(One-stop) 종합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

을 통한 기관 협력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제인력 교류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상담 등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김서주 기자

뉴욕멜론은행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이후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협력 행보 가속



도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며 "BNY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전북이 국제적 위상을 갖춘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 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참여기업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

고흥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천억 원' 돌파

수출액 2024년 대비 2025년 22% 증가 노력 결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산 물김 위판액이 지난 10일 기준 2,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향후 위판 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위판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고흥군에서는 총 403어가가 10,714헥타르(107,140㏊)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며 청정 고흥산 김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양식 초기 영양염 부족과 강우량 감소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물김 생산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과 단기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위판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2,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김 양식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품질 중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부 평가된다.

군은 그동안 양식 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정비 등을 통해 김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고흥산 물김은 생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지 위판 단계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출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4년 김 수출액은 4,625만 4,000달러(1,438톤)였으며, 2025년에는 5,636만 6,000달러(1,662톤)

을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 약 22% 증가했다.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완주, 기독교 근대기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한다

완주군이 1900년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기 기독교 기록물들의 역사적·자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학계 교수, 서지학 전문가, 유물 소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기록 유산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고증 결과 ▲삼례제일교회 ▲소농교회 ▲계월교회 ▲위봉교회 등이 소장한 기록물은 초기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교육, 31운동 등 당시 완주의 사회 변화와 근현대사 주요 사건

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완주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적 가치가 입증된 기독교 기록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보존 가치가 특히 큰 일부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승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기독교 근대기록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로데 선교사 관련 자료 발굴 등 소중한 기록물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이 '2025년 정보공개 종

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한 행정 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평가는 ▲사전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5개 분야 12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다수의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아, 상위 20% 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군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 항목과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그리고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한 군민들의 '고객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기자